이준석측 '당권-단일화 거래설'…국힘 계파갈등 조짐

한동훈 "친윤들 당 팔아넘기려 해"
당 지도부·친윤계 "납득 어려워"
양향자 "제안자 못밝히면 자작극"
이준석 "당권투쟁 노린 세력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여성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허명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측이 주장한 '당권-단일화 거래 제안설'을 둘러싸고 22일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친윤(친윤석열)들이 다른 당에 우리 국민의힘의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는데 친윤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라고 썼다.

이어 "아직도 친윤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의 사당(私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의 뒷배가 없어진 친윤들이 당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당에서 믿을 것 같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윤들이 자기들 살자고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을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그냥 두고 보실 것 같나"라며 "이번 대선은 이런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친윤도 퇴진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라며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식의 말을 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나 친윤 성향 의원들은 거래 제안설의 실체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그 배경에 차기 당권을 노리는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친윤계 의원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당권을 어떻게 주나"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채 친한계(친한동훈) 의원들과 함께 별도 유세를 벌이는 것도 차기 당권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두당 사이에 신경전도 팽팽한 양상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혁신당을 향해 "(거래를 제안한) '친윤'이 누군지 밝히라. 못 밝히면 자작극으로 간주한다"며 "밝히면 그토록 비판했던 친윤을 정리할 기회이고, 못 밝히면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퇴출"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드러내고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대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사석에서 (국민의힘 인사로부터) 들어본 적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타 당의 대선 주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가 아니다. 자해적 행위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양향자 위원장이 '당권 거래를 제안한 친윤이 누군지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당권을 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역할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친한계는 이것을 대선 과정 중에 자당 내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선 과정인데도 그 안에선 당권 투쟁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그분들의 내부 갈등에 우리 개혁신당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대선 후보 4人, 오늘 2차 TV토론… '사회공약' 검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3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초청 2차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한다.

2차 토론회 주제는 '사회' 분야다. 각 후보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을 진행한 후,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공약 검증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는 KBS, MBC, SBS,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복지TV, 아리랑TV 등을 통해서 동시 생중계된다.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의 마지막(초청 3차) 후보자 토론회 주제는 정치 분야로 오는 27일 오후 8시 상암동 MBC에서 열린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전남 7대 핵심공약 발표 "대전환 출발점"

의료·에너지 등 22개 시·군 맞춤
전남 통합의대·AI 슈퍼클러스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7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을 반영한 '맞춤형 공약'을 함께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선거에 나섰다.

전남도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서삼석·주철현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전남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전남 공약은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전환을 동시에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전남 7대 핵심공약은 △도민 건강과 공공의료 획기적 개선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문 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관광·문화·해양 허브 조성이다.

이와 연계한 지역별 공약도 구체화됐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화순 '전남·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목포·순천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설립 등이 공약으로 꼽혔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맞춤형 공약으로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친환경 전환·특별법 제정' △광양 '수소환원 제철 기술 전환 지원' △해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목포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며, 영광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된다.

미래산업에는 △고흥 '우주발사체 융복합 클러스터' △함평 '미래모빌리티 특화산단' 및 '그린바이오 혁신클러스터' △해남 솔라시도 '글로벌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등 첨단 전략산업 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교통 공약으로는 △여수공항 '남중권 관문 국제공항 승격' △호남고속철도 해남·완도·진도 연장 검토 △광주~나주 광역철도 조기 착공 △담양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농수축산업 육성에는 △해남 'K-농업리드 지역특화 첨단농산업 플랫폼' △무안 'K-푸드 융복합산단' △무안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광·문화 부문으로는 △여수 일원의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육성' △순천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목포 '세계 섬 엑스포 개최' △장성 '백양사 관광지구 활성화' △K-디즈니 조성 등을 지역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지현 기자

민주, 대선 공약집서 '정부조직 개편안' 뺀다

"2차 추경 편성이 시급한 과제"
李 "기본사회 전담기구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사전투표! 대한민국 변화의 위대한 첫 걸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오는 27~29일 발간을 목표로 공약집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안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재부 개편의 경우 경제·금융·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정부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올해 1차 추경 규모(13조원)가 경기 회복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차기 정부에서 2차 추경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조직 개편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존 체계에서 2차 추경을 추진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 개편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정부 조직 개편은 향후 민주당의 역점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당 안팎에선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기재부 개편안이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선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성장시대와 첨단기술사회를 맞아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선관위, 尹 관람한 '부정선거' 영화 "깊은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된다"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개표 등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한다"며 "선거 불신을 해소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학회 주도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의 운영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